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발 행 부 수
유료구독률 1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75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음력 11월 19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4·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를"

오영훈 지사·김광수 도교육감 등 대정부 건의문 공동 기자회견 통해 "교과서 편찬 준거에도 포함" "올바른 역사 교육이 4·3의 정의로운 해결 시작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 제주4·3유족회 등이 제주4·3을 개정 교육과정에 기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창범 4·3유족회장 직무대행 등은 지난 9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 명시를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삭제를 추진해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4·3은 고등학교 한국사에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돼 지난 2020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기술됐고 중학교 7종 중 5종, 2023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4종에도 담길 예정으로 학습요소가 삭제되면 교과서에 제주4·3을 다뤄야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 명시됐던 제주4·3이 삭제되며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에 제주4·3 기술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해 진실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의 평화·상생 정신은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나가고 있으며 4·3의 진실된 역사와 올바른 과거사 해결의 여정을 미래 세대에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이 명시돼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역사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교과서 편찬 준거에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4·3유족회도 "제주4·3을 미래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4·3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영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김창범 4·3유족회장 직무대행 등은 지난 9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도영기자

여야, 15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도, 19개 사업·800억 국비 확보 위해 막판 총력전

여야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도 넘기며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만일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제주도의 국비 확보 막판 총력 절충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받고 각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증액과 감액을 심의해 왔다. 제주도는 정부의 총 19개 사업에 대해 800억여원의 신규반영 및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세부사업별로는 교래정수장현대화사업 관련 25억원, 서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1억원, 동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억원, 해녀의전당 건립 9억원 등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도, 제주수산물수출협회와 간담회서 밝혀

내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제주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민선8기 제주도정이 내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제주SF영어조합법인 회의실에서 제주수산물수출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제주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및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 지사는 내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제주도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능 수치 측정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인 만큼 수출협회 측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본격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수출협회를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수산물 수출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도록 관련 단체·기업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태윤기자

2022년도 하반기 전기 이륜차 보급

140대 범위… 도, 16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140대 범위 내 민간 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하고, 접수기간을 16일까지 연장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최대)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이다. 또 본인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도내 전기이륜차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전기이륜차 출고·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기이륜차 영업점이나 저탄소정책과(710-2614)로 문의 가능하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무공해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11일 <17시 기준>
신규 328
누적 35만3941